

## 국내 소식

EU 환경규제 '리치' 6월 발효...  
"위기를 기회로"

유럽연합(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sation of CHemicals) 시행 시점이 오는 6월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지난달 산업자원부, 외교통상부 등 11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EU REACH 대응 종합추진계획'을 마련, 노무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EU는 지난해 12월 환경보호와 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화학물질관리를 대폭 강화한 REACH 도입을 채택하고 오는 6월 본격 발효키로 했다.

기존 환경규제(RoHS, WEEE 등)가 제한된 제품·물질에 대해서만 규제를 가한 데 반해, REACH는 모든 화학물질과 완제품(함유된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REACH 도입에 따라 국내 기업이 EU로 수출할 경우 기존 화학물질(1t/년 이상)과 완제품(자동차, 전자 등)내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정보를 생산·등록해야 한다. 사전등록기간은 오는 2008년 6~11월이며, 본등록은 2008~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기한 내 사전등록하지 않은 기업은 EU로의 제품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이후에 등록을 한다고 하더라도 막대한 비용부담으로 수출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등록비용은 약 2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먼저 REACH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등 관련 업계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 내년부터 자동차·전자제품에 납·수은 제한

내년부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에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등 유해물질 사용이 제한되고 폐자동차의 재활용율을 85% 이상 높여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달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은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컴퓨터, 휴대폰, 오디오, 팩스밀리, 프린터, 복사기 등 전기·전자제품 10종, 승용차 및 3.5톤 미만의 승합차·화물차 등이다. 함유기준은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납, 수은, 6가크롬 1,000mg/kg, 카드뮴 100mg/kg이다. 자동차 재활용 가능율은 내년부터 85% 이상, 2010년 1월부터는 95% 이상으로 규정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조치들로 연간 3,76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환경성을 국제수준으로 제고시켜 EU 등의 환경규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제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 경유차 저감장치 떼면 과태료 100만원

정부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나 저공해 엔진을 부착한 경유차 소유자가 임의로 장치를 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환경부는 지난달 경유차 소유자 등의 관리 책임을 강화한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유차 소유

자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맘대로 떼는 등 관리 의무를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시·도지사의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시정명령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 중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에 결함이 발생할 경우 제조·공급·판매자의 인증이 취소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환경부는 '수도권대기환경위원회'가 중·장기계획을 이미 달성했다고 판단,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개정 대기환경특별법은 오는 8월 국회에 제출되며 법 개정 및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시점부터 효력을 갖는다.

## 멸종위기종 산양을 월악산에서 만난다



멸종위기종인 산양이 충북 제천 월악산에서 본격 복원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 4월 18일 월악산국립공원 일원에 산양 6마리를 방사한데 이어 25일 4마리를 추가 방사했다. 이는 환경부의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증식·복원 종합계획'에 따른 것으로 지리산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에 이어 실시되는 두 번째 복원사업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월악산에 1982년 이후 관찰되지 않은 산양을 복원한다는 취지로 민간동물원에서 인공 증식한 산양 6마리를 1994년부터 세차례에 걸쳐 방사했다. 현재는 월악산 영봉 근처에서 산양 1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앞으로 방사개체 및 기존 서식 개체에 대해 2009년까지 모니터링을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복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968년 11월 20일 천연기념물 제217호로 지정된 산양은 1998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보호를 받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등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다

## 농어촌 지역주민 수도물 안심하고 드세요

환경부는 방사성 물질 및 불소 등 건강유해물질이 검출되는 등 문제가 있는 소규모 수도시설을 국고를 들여 집중 개량한다. 환경부가 국고를 들여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벌이는 이번 사업에서 환경부는 수질기준 초과시설과 25년 이상된 노후 시설 등 총 7764개 소규모수도시설에 8686억원을 투입해 개량하고 6473곳은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며 불량시설 297곳은 폐쇄하는 등 농어촌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도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환경부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소규모 수도시설 2만2725곳 중 25년 이상된 노후시설이 전체의 47%에 달했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시설이 73%였다. 소독시설이 없거나 마을 이장 등 관리자가 직접 소독하는 시설이 43%였으며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이 7.8%였다. 2005년말 현재 전체 인구의 5.2%인 253여만명이 소규모급수시설에서 생활용수를 공급받고 있다. 앞으로 환경부는 소규모수도

시설 개량사업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고 이후에도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및 관리매뉴얼을 마련, 농어촌 주민들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 소음 규제기준 마련 전 아파트도 층간소음 피해배상

소음 규제 기준이 마련되기 전에 준공된 아파트라도 층간 소음이 심각할 경우 분양사가 입주자에게 피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강원도 원주시의 한 아파트 입주민 최모씨 등 21명이 아파트 부실시공에 따른 층간소음 피해를 입었다며 보수비용 등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분양사에게 2억6000여 만원을 배상하라는 재정결정을 내렸다. 분양사는 공동주택 거주자의 바닥충격음 수인한계(참을 수 있는 한계로 58데시벨)는 아파트가 준공된 뒤인 2003년도에 개정된 법률에 의해 설정된 점을 들며 이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아파트는 2000년 7월 준공된 뒤 임대됐다. 2005년 9월 분양됐다. 그러나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의 사용목적에 감안할 때 입주자들이 기대하는 쾌적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소음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판단, 분양사가 차음보수비의 절반을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이 아파트의 경량충격음은 62~65데시벨로 수인한계 58데시벨을 초과하고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결정으로 유사한 층간소음 피해분쟁사례가 신청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아파트 건설사가 갈등해소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수변구역 관리 강화된다

환경부는 수변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토지매수사업의 집행규정 명확화,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자 확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변구역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4대강에 수변구역 토지매수 현황 및 전망, 수변녹지조성 계획 등을 포함하는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또 터널 공사 때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 배출시설은 예외적으로 수변구역내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토지매수사업이 명확한 규정에 의하여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매수가격의 산정방법·시기, 매수절차 및 매수우선순위 선정 등에 관한 근거도 마련했다. 이 외에도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자를 모든 유수의 사용자로 확대, 법령 정비대상과제 정비, 수질개선사업계획 수립시기 변경, 수계관리위원회 위원 조정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대한상공회의소 소식

#### 중국 총리 초청 간담회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4월 11일 신라호텔에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를 초청하여 오찬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찬간담회에서 원 총리는 "양국간 경제협력을 기존의 일반 제조업에서 농업과 첨단기술, 서비스업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한중 양국은 지리적 근접성과 편리한



교통, 상호 보완적인 경제구조 등 경제협력에 관해 천혜의 유리한 조건과 커다란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원 총리는 양국간 협력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양국간 무역 및 투자의 확대 △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 강화 △FTA 공동연구 추진 등을 제시했다.

특히 한중 FTA에 관해 원 총리는 "양국 경제무역의 장기적인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산관학 공동연구에 박차를 가해 서로 Win-Win의 방안을 조기 제출함으로써 FTA의 최종적인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자"고 촉구했다.

이날 오찬간담회에는 원 총리를 비롯해 보시라이(薄熙來) 상무부 장관, 리자오싱(李肇星) 외교부 장관 및 중국경제사절단 등 중국측 인사와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경제단체장과 라응찬 신한금융지주회사 회장,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구본준 LG상사 부회장, 허동수 GS칼텍스 회장, 김신배 SK텔레콤 사장을 포함한 한국기업인 등 총 350여명이 참석했다.

## 제7회 남녀고용평등 강조주간 기념식

대한상공회의소와 노동부, 한국일보가 공동 주관하는 '제7회 남녀고용평등 강조주간 기념식'이 지난 4월 2일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이

날 기념식에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대통령표창에 엔에이치엔(주), (주)셀트리온이, 국무총리표창은 (주)이리콤, 한국관광공사, 강원도원주의료원이, 노동부장관표창은 포스텍전자(주) 등 7개 업체가 수상했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가정과 사회 곳곳에 잠재되어 있는 여성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출산, 양육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기업 또한 가정과 직장의 양립이 가능한 고용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상수 노동부 장관,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종승 한국일보 사장, 유재섭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과 우수기업 관계자, 수상 유공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